과학의 날 「기술상」 수상 건설안전協 權五錫 회장

『건축물의 안전은 계획, 조사, 설계, 시공에서부터 관리·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두철미 원칙을 지킬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에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가운데 기술상을 받은 權五錫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장(59)은 우리 건설분야의 산 증인. 30년 넘게 현대건설에 근무하면서 대청댐, 대불단지조성, 영산강하구댐, 남산1호터널공사 등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지난 88년 건설현장의 재해와 부실을 추방하려는 취지로 만든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 5-8호선 안전진단에 참여했다. 또 강남구 매봉터널 안전진단과 보강대책을 시공업체로부터 의뢰받기도 했다.

『우리가 해외에 건설한 건축물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수준입니다. 국내에선 공비절감과 공기단축을 자랑하는 우리의 풍토가 부실건축의 근본원인입니다.』

權회장이 진단하는 국내 건축물의 부실원인은 「원칙의 무시」.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의 양 등을 주어진 기준대로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바닷모래(海沙)를 쓰더라도 충분히 세척해 염분함유량을 규정 이하로 줄이거나 철근에 부식방지 도포를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70년대말 서울지하철 1호선 1백35km를 건설하면서 1km에 1명꼴인 무려 1백30여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율은 일본 0.3%, 대만 0.45%, 싱가포르 1.03% 등에 비해 크게 높은 1.18%로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4월 23일자〉

건설안전협회-피부로 느끼는 실질지원주력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사업 실시로 안전의 사각지대로 평가되던 1백억 미만 건설현장도 이제 효과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지도 지원사업의 내용과 민간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사업계획을 살펴본다.

공사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3월 도입된 기술 지원제도가 민간전문기관의 지정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 3만7천여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현장은 월1회 이상 전담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20억~1백억원 미만 현장은 분기에 1회 이상 정기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술지도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주는 안전관리비 중의 일부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설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지정된 민간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기술 지원을 받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나 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이 면제된다.

기술지도수수료는 전담기술지도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15% 미만, 정기기술지도는 10% 미만으로 한정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력은 건설안전기술사, 건설분야 기사 등을 정해진 경력에 맞게 확보해야 하며 설비는 기술지도에 필요한 가스농도측정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비파괴검사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본부와는 별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노동부는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단체를 복수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까지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기술지도 민간전문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 2곳.

안전관리 및 건설분야 안전진단 30년 경험의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姜晋求)는 전문기관 지정과 함께 「건설재해예방국」을 발족시키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89년 설립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회장 權五錫)는 그동안 실시해오던 교육 및 진단사업과 연계한 기술지도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지역에 지부를 설치했으며 금년말까지 전국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기술지원사업에 임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별도의 발대식도 개최한 바 있는 기술협회는 형식적인 기술지도보다는 현장 경영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술·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안전점검전문기관, 노후불량주택진단 전문기관, 하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협회는 서울지부에 기술사 2명, 기사 10명 등 5개 지부에 6명의 기술사와 50명의 기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확대에 대비키 위해 지부당 5명씩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신문 5월 1일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폭 강화

앞으로 지하철 공사 등 대형 지하굴착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최근 대구 도시가스 폭발참사와 관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시공중인 지하철현장과 경부고속전철공사의 터널현장, 대형빌딩의 지하굴착공사 등에 대해서는 붕괴·화재·폭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성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있어 기존의 건설안전 전문가 외에 앞으로는 가스 및 시공전문가도 추가로 참여시켜 공사현장 붕괴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연 1회씩 돼있는 심사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매분기마다 하도록 해 주요 미이행사항 발견시 공사중지 또는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심사내용 및 확인사항을 전산화해 공사진행에 따른 주요 위험항목을 체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오는 97년까지 특수제작한 교육용 대행버스 15대를 연차적으로 확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가스누출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휴대용 가스검지기와 산소농도측정기를 하도급업체 등에 장기임대해 주기로 했다.

〈산업안전신문 5월 15일자〉

안전사고업체 법정최고형 처벌

앞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낸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공공공사 입찰에서 제외되고 처벌도 법이 정한 최고형을 받게 된다.

또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해 최적격 낙찰제를 조기 도입하고 외국감리업체의 도입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吳明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감리협회 등 건설관련 7개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단체장 회의」를 갖고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吳장관은 이날 『사고를 낸 업체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발주처에 통보하는 등 사고업체를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吳장관은 또 『업체처벌에 있어서도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한번 사고를 낸 업체는 업계에서 완전히 배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吳장관은 『최적격 낙찰제를 도입,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상태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吳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민간책임감리제를 시행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며 감리의 문제점을 지적, 97년의 외국감리 개방일정보다 빠르게 감리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吳장관은 이밖에 정부의 초강경조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관련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토록 당부했다.

〈산업안전신문 5월 15일자〉

일반 · 특수건설업 신규면허 실시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일반 및 특수건설업 신규면허를 예년보다 앞당겨 오는 8월 20일부터 내주기로 하고 6월 19일부터 5일간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업체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올 7월부터 신용평가제를 도입하는등 면허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에 대한 신규면허실시계획을 예고, 이달 18일 공고를 거쳐 다음달 19일에서 23일 사이에 각 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역은 제주개발건설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부터 면허발급업무 일체가 각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지역별로 신청서를 심사,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보름 동안 면허처분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지금까지 심사기간중에 민원인(신청인)이 행정절차와 면허기준 등을 잘 몰라 서류를 보완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점을 감안, 올부터는 실시계획 공고 이전의 사전예고제와 함께 신청예정자를 상대로 한 신청요령교육도 각 지역별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올부터 매년 신규면허가 실시됨에 따라 업체수증가로 인한 과당경쟁과 공사불실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그 대책의 하나로 오는 7월부터 신용평가제를 도입,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제한하는 등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영업활동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Q대상공사를 확대해 경영의 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면허대여를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건설기술자격을 빌려 부당하게 면허를 취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는 물론 벌칙부과와 함께 자격증 대여자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건설신문 5월 15일자〉

중대재해 사법조치 강화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대형건설업체 현장소장이 구속되는 등 중대재해에 사법처리가 강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54-1 분당 정보통신센터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시공회사인 두산건설(주) 현장 소장 金永鉉 씨(41)와 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유마건설 대표이사 朴永默 씨(56)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조치했다.

도급순위 30위이내 대형건설업체 현장소장이 중대재해로 구속되기는 지난 93년 이후 처음이며 올들어서는 한진중공업, 한국곤도라, 풍남정밀에 이어 네번째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金씨 등은 지난 4일 분당정보통신센터 수영장 건설공사에서 거푸집 지보공을 부실하게 조립,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지보공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스라브가 붕괴돼 지하에서 작업중이던 강학희 씨가 숨지고 5명은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안전신문 5월 22일자〉

부실벌점제 도입 시행

건설업체의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부실벌점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 건설기술자의 책임있는 현장관리 유도를 위해 건설기술자 신고제가 도입되고 경력수첩도 발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바닥면적 6천㎡ 이상 건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누계벌점을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연 2회 공개한다.

건교부는 또 벌점이 높은 업체에 대해 3년간 55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벌점이 높은 설계·감리업체 또한 입찰자격 심사시 불이익을 주고 건설기술자·감리원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벌점부여는 건설관련업체의 경우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항목별로 최고 20점에서 1점까지 주어지며 누계벌점 정도에 따라 가중기준을 두고 감점점수로 환산,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감점형태로 반영한다.

〈산업안전신문 5월 22일자〉

陳捻 노동부장관 취임

노동부장관에 陳捻 前동자부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주요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조직적 사고에 업무추진력·친화력 등을 고루 갖춘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매사 일의 줄거리와 맥을 신속히 파악,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풍부해 기획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大 상과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으로 30여년을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89년 해운항만청장 재임시 항운노조를 설득, 파업위기를 무사히 넘긴 「노동행정」의 현장 경험도 있다. 부인 서인정(徐仁貞·44) 여사와 2남, 취미는 독서이다.

△ 전북 부안 출신(55) △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 해운항만청장 △ 재무부 차관 △ 경제기획원 차관 △ 동자부장관 △ 국가경영전략 연구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사장

〈안전보건정보 6월 1일자〉

안전의식 대대적 홍보

범정부차원의 안전문화정착 캠페인이 이달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李洪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제1청사에서 관계부처장관과 노동·경영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추진 중앙협의회 1차회의를 열고 이달말부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 전국민의 안전의식 생활화를 적극 도모키로 했다.

이날 정식 발족한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내무·교육·통산·노동·건교·공보처 장관, 행정조정실장 등 7명의 정부위원과 방송협회·신문협회·노총·경총·보험감독원·여성단체협의회·건설협회·경실련 대표 등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추진방향과 제도개선 등 제반사항을 종합 조정하게 된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각 사업장과 가정에서 안전점검표 부착운동을 벌이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홍보를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초·중·고 교과과정에 안전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검토하는 한편 주요공단 및 시·도 회관 등에 안전관련 상설홍보전시관을 설치, 운영해 사회전반에서 습관화된 안전생활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陳捻 노동부장관은 안전문화 추진운동 전개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6월말에 노·사·정 및 언론계대표 등 4인으로 안전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안전문화운동추진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공단 본부와 13개 지도원에 각각 추진본부와 지역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陳장관은 또 『안전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차원에서 중·고교 사회과목 교과서에 안전문화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사업장은 물론 학교·가정 안전교재와 교육기법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안전의 생활화를 도모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산업안전신문 6월 5일자〉

建設技術者 21만名 달해

건설기술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0일 韓國建設技術人協會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건설기술사 1천322명, 기사 1급 8천178명, 기사2급 7천368명 등 1만6천868명이 배출돼 지난해 말 현재 건설기술자는 모두 21만 326명(자격 보유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현재 기술자를 등급별로 보면 기술사 7천303명, 기사1급 10만6천415명, 기사2급 9만6천608명 등이고 분야별로는 토목 6만2천49명, 건축 8만4천39명, 건설기계 3만312명, 국토개발 2만6천810명, 건설안전 6천747명, 교통 369명 등이다.

또 등급별 분야별 기술자수는 기술사의 경우 토목시공 2천193명, 건축시공 2천176명등 2개 공종이 가장 많은 반면 건축설비는 3명에 불과했고 기사1급은 건축 3만9천518명, 토목 2만9천870명인 데 비해 건축설계 904명, 공조냉동기계는 947명에 그쳤으며 기사2급은 건축 3만6천465명인 데 반해 건설재료시험은 1천647명이었다.

한편 建技協의 玄雲河 인력관리실장은 올 건설업면허 실시에 따른 인력수급전망과 관련, 지난해 기술사 등 기술인력이 많이 배출된 데다 올 신규면허 조건완화로 인력난은 없을 것이나 지역별로는 수급상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94년말 현재 건설기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사

구 분	'93 배출	'94 배출	누 계 (자격수)
합 계	866	1,322	7,303
토 목	437	643	3,580
토질 및 기초	38	37	212
토목구조	56	59	309
항만 및 해안	13	11	80
도로 및 공항	36	48	247
철도	2	11	44
수자원개발	11	12	131
상하수도	19	25	215
농어업토목	5	3	106
토목시공	243	411	2,193
토목품질시험	14	26	43
건 축	315	539	2,736
건축구조	21	29	187
건축설비	—	—	3
건축기계설비	21	47	189
건축전기설비	15	30	157
건축시공	249	419	2,176
건축품질시험	9	14	24
건설기계	42	56	406
공조냉동기계	15	29	221
건설기계	27	27	185
국토개발	37	40	325
도시계획	17	16	152
조 경	11	11	113
축 지	9	13	60
건설안전	14	27	140
교 통	21	17	107

△ 분야별 건설기술자 현황

구 분	합 계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합 계	210,326	7,303	106,415	96,808
토 목	62,049	3,580	36,366	22,103
건 축	84,039	2,736	41,552	39,751
건설기계	30,312	406	10,122	19,784
국토개발	26,810	325	14,726	11,759
건설안전	6,747	149	3,387	3,211
교 통	369	107	262	—

△ 기사1급

합계	10,931	8,178	106,415
토 목	3,032	3,092	36,366
토 목	2,883	2,860	29,870
건설재료시험	149	232	6,496
건 축	4,518	2,789	41,552
건축설비	228	81	904
건 축	3,720	2,392	39,518
의 장	570	316	1,130
건설기계	2,336	1,395	10,122
공조냉동기계	224	194	947
건설기계	2,112	1,201	9,175
국토개발	563	645	14,726
도시계획	181	173	3,336
조 경	194	283	5,174
축 지	188	189	6,216
건설안전	407	178	3,387
교 통	75	79	262

△ 기사2급

합계	8,194	7,368	96,608
토 목	1,1310	1,600	22,103
토 목	1,159	1,477	20,456
건설재료시험	151	123	1,647
건 축	3,693	2,574	39,751
건축설비	769	730	2,190
건 축	2,429	1,321	36,465
의 장	495	523	1,096
건설기계	2,272	2,276	19,784
공조냉동기계	263	432	1,754
건설기계	2,009	1,844	18,030
국토개발	805	808	11,759
조 경	266	213	5,186
축 지	539	595	6,573
건설안전	114	110	3,211

〈일간건설 6월 12일자〉